

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사례

1. 코로나19 관련 적극행정 사례

기관명		제도 활용 구분	추진 내용
광역	기초		
인천	서구	지원위 활용 (3.20)	<p>【안정적인 마스크 공급을 위한 행정처분 유예】</p> <p>(문제점/필요성) 코로나19가 확산되자, 종이상자 제조업체가 이미 마스크를 제조하면서 구청에 업종을 변경 신청을 했으나, '인천시 도시관리계획'상 항만에서는 마스크 제조를 할 수 없어 업종 변경 불가 및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</p> <p>(조치) 국가적 재난 상황임을 감안하여 소관 업무 담당자는 「적극행정 지원 위원회」에 처리 방향에 대하여 의견 제시 요청, 「적극행정지원위원회」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나, 국내 마스크 부족에 따라 일정기간* 행정처분을 유예하도록 의견 제시 * 현 '심각'단계에서 '경계'단계로 하향 조정된 후 2개월 이내</p> <p>(결과/효과) 마스크(2만장/일) 제작</p>
경북	-	지원위 활용 (3.11)	<p>【생활치료센터 수의계약으로 신속한 수용시설 확보】</p> <p>(문제점/필요성)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치료센터를 다수 개소해야 하는 바, 생활치료센터로 적합한 도내 시설물 중 공유재산 이외 민간 업체와 시설물 수의계약 필요 발생 *계약금액 : 1,241,680천원</p> <p>(조치) 3.12일 개소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어, 「적극행정 지원위원회」에 의견 제시 요청하여 수의계약 체결</p> <p>(결과/효과) 신속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생활치료센터 개소</p>
강원	-	사전 컨설팅 활용 (2.6)	<p>【코로나19 대응관련 금액 한도 없이 수의계약 체결】</p> <p>(문제점/필요성) 코로나19 방역용 마스크 신속 구매를 위해 금액 한도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 필요</p> <p>(조치) 코로나19의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재정집행이 필요하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사전컨설팅 의견을 회신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</p> <p>(결과/효과) 신속하게 방역용 마스크를 구매하여 저소득층 지원</p>
강원	-	사전 컨설팅 활용 (2.18)	<p>【코로나19 대응으로 금액 한도 없이 수의계약 체결】</p> <p>(문제점/필요성) 코로나19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동형 X-ray 장비의 신속한 활용을 위해 금액과 상관없이 수의계약 필요</p> <p>(조치) 일반입찰에 의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긴급한 상황으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사전컨설팅 의견을 회신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</p> <p>(결과/효과) 신속한 장비 구입을 통한 선별진료소 활용</p>

기관명		제도 활용 구분	추진 내용
광역	기초		
강원	-	사전 컨설팅 제도 활용 (3.9)	<p>【타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비용 지원】</p> <p>(문제점/필요성) 삼척의료원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환되어 공공산후조리원이 폐쇄 결정됨에 따라 타 시·군의 산후조리원 이용시 이용료 지원이 어려움</p> <p>(조치)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타 시·군의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한 이용지원이 가능하다고 사전컨설팅 의견 회신</p> <p>(결과/효과) 산모들이 원하는 인접 시·군 산후조리원 이용을 위한 비용 지원</p>
충북	괴산	사전 컨설팅 활용 (3.10)	<p>【임의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】</p> <p>(문제점/필요성) 코로나19 대응지침상 규정된 자가격리 대상(확진환자, 의사환자, 확진환자의 접촉자(무증상자))만 국비로 생활지원비, 유급휴가비 지원이 가능, 하지만 해당 군수가 긴급행정명령으로 발동한 임의 자가격리자도 지원이 가능한지 문제됨</p> <p>(조치) 주민의 임의 자가격리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행정조치로 임의 자가격리자도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를 보건복지부고시에 준하여 지방비로 지원가능하다고 사전컨설팅 의견 회신</p> <p>(결과/효과) 적극적 해석으로 임의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</p>
충북	-	사전 컨설팅 활용 (3.19)	<p>【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복나누미사업 임금 지원】</p> <p>(문제점/필요성)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건복지부 경로당 휴관 권고에 따른 휴관으로 행복나누미 활동을 할 수 없어 임금 지원이 가능한지 문제됨</p> <p>(조치) 경로당 휴관은 사용자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휴업수당 지급은 가능하다고 사전컨설팅 의견 회신</p> <p>(결과/효과) 적극적 해석을 통한 수당 지급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 도모</p>
충북	충주	사전 컨설팅 활용 (3.11)	<p>【중증장애가 있는 혈액투석 환자에 대한 제한적 교통편의 제공】</p> <p>(문제점/필요성) 중증장애가 있는 혈액투석 환자에 대하여 코로나19 감염방지를 위해 교통 편의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됨</p> <p>(조치) 타인의 도움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신체·정신상의 중대한 질병을 앓고 있는 자로서 코로나19 감염방지 및 환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할 시장·군수 등이 인정하는 경우 교통편의 제공행위가 가능하다고 사전컨설팅 의견 회신</p> <p>(결과/효과) 적극적 해석으로 중대한 질병을 앓고 있는 자의 교통편의 제공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</p>
충남	-	사전 컨설팅 활용 (3.24)	<p>【코로나19 의료인력 감염관리 수당 추가 지급】</p> <p>(문제점/필요성)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에 따라 도내 4개 의료원이 코로나 감염증 전담병원 지정 운영 중으로, 심각단계 장기화 시 의료인력 이탈 우려</p> <p>(조치) 의료인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특별 지원계획으로 3월부터 상황 종료시 까지 1인당 40만원(도내 4개 의료원 1,382명) 수당 추가 지급 가능하다고 사전컨설팅 의견 회신</p> <p>(결과/효과) 코로나19 의료인력의 사기 진작 및 이탈 방지</p>

기관명		제도 활용 구분	추진 내용
광역	기초		
충남	예산	사전 컨설팅 활용 (3.24)	<p>【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시 납부기간 연장】</p> <p>(문제점/필요성)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이행강제금 납부에 경제적 부담 가중</p> <p>(조치) 해당군은 도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하였고, 이행강제금 부과시 납부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사전컨설팅 의견을 회신</p> <p>(결과/효과) 이행강제금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</p>
광주	-	제도의 (기타 적극적 자세로 코로나 대응)	<p>【코로나19 대응 관련 사전컨설팅 패스트트랙 운영】</p> <p>(문제점/필요성) 현행 사전컨설팅 신청 결과는 30일 이내 통보하도록 규정</p> <p>(조치) 경제위기 극복, 코로나19 방역대응과 관련하여 신청된 사전컨설팅 사안은 패스트트랙 운영을 통해 신속(5일 이내) 처리</p> <p>(결과/효과) 신속한 사전컨설팅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코로나19 대응</p>
인천 충북 경남	대전 서구 충북 평창 충북 옥천 경북 성주 경남 김해	제도의 (기타 적극적 자세로 코로나 대응)	<p>【코로나19 대응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 지원단 구성 운영】</p> <p>(조치)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의 긴급을 요하는 업무처리에 대한 직원 부담을 완화시키고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단* 구성.운영</p> <p>* 규제, 법무, 예산, 사전컨설팅, 일상감사, 복무, 인사, 계약 등</p> <p>(결과/효과)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총괄적 협력 체계 구축</p>
세종 등	경기 고양 경남 창원 등	제도의 (기타 적극적 자세로 코로나 대응)	<p>【드라이브 스루(Drive-Thru) 의 혁신적인 검사방식 운영】</p> <p>(문제점/필요성) 코로나19의 높은 전파력으로 기존 음압텐트형 선별진료소의 경우 의료진의 바이러스 노출, 대기중 2차 감염, 매 검사마다 소독실시로 대량검사에 한계 발생</p> <p>(조치) 검사대기 수요의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환자가 자동차에 탄채 본인 확인→검체채취, 소독 및 교육'까지 원스톱 처리</p> <p>(결과/효과) 접촉을 최소화함으로써 대기중 2차 감염 방지 및 핫라인 접수 사전예약을 통해 대기시간 절약으로 대량의 검사 가능, 한국형 검사 모델로 美, EU 등 선진국에서도 적극 도입</p>
경기	-	제도의 (기타 적극적 자세로 코로나 대응)	<p>【폐기처분 위기에 놓인 급식용 농산물 판매 지원】</p> <p>(문제점/필요성)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개학 연기로 도내 학교급식 재배 농가의 친환경 농산물 348톤이 폐기처분 위기에 놓임</p> <p>(조치) 도는 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와 함께 친환경 농산물 꾸러기(11개 품목, 4kg)를 구성하고 SNS 등에 적극 홍보하여 7,183개 조기 완판</p> <p>(결과/효과) 학교급식 농산물 재배 농가의 피해 최소화</p>

기관명		제도 활용 구분	추진 내용
광역	기초		
전남	-	제도의 (기타 적극적 자세로 코로나 대응)	<p>【해외입국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운영】</p> <p>(문제점/필요성) 해외 입국자에 의한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가 어려운 입국자 관리 필요</p> <p>(조치) 유럽, 미국 등 해외에서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 도민 중 거소의 사정이 여의치 않은 도민(①자택에 방이 1개밖에 없어 가족들과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, ②가족 중 만성기저질환자, 임산부 등 고위험군과 동거하고 있는 경우)을 도 생활치료센터(5개소, 338실)에 입소시켜 격리 해제시까지 관리</p> <p>(결과/효과) 해외 입국자 중 별도 격리 시설이 필요한 자를 관리하여 코로나 19 전파의 선제적 차단</p>
경북	-	제도의 (기타 적극적 자세로 코로나 대응)	<p>【경북형 마스크 개발】</p> <p>(문제점/필요성) 코로나19 확산으로 KF80, 94 마스크의 핵심 필터인 MB부직포 부족 사태 발생</p> <p>(조치) 필터 교체형 '경북형 마스크'를 자체 개발 * 면마스크에 스펀본드(SB) 부직포 필터 3장을 끼워 날마다 교체·사용하는 방식으로 방제 성능이 면마스크 20%보다 높은 50% 수준으로, 비말 전파 차단용으로 기준 적합</p> <p>(결과/효과) 도내 80세 이상 어르신 및 공공기관에 공급하여 코로나19 예방</p>
경북	안동	제도의 (기타 적극적 자세로 코로나 대응)	<p>【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금 50% 감면】</p> <p>(문제점/필요성) 코로나19 확산으로 생산과 수출에 어려움</p> <p>(조치) 경북바이오 산업단지 내 기업들에게 공공폐수처리 시설 비용부담금 3월, 4월에 한해 50% 감면 혜택 시행(전국 최초)</p> <p>(결과/효과)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</p>
경북	군위	제도의 (기타 적극적 자세로 코로나 대응)	<p>【코호트 집단요양시설 근무자에게 숙박시설 지원】</p> <p>(문제점/필요성)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집단요양시설에 대한 코호트 격리시 관내 OO요양원의 경우 근무자가 숙박할 수 있는 임시 생활공간이 없어 애로</p> <p>(조치) 군은 코로나 격리기간(2주) 동안 임시숙박시설(컨테이너)를 즉시 설치하여 요양원 종사자들이 임시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</p> <p>(결과/효과) 해당 요양원 내 코로나19 발생자 無</p>
경북	군위	제도의 (기타 적극적 자세로 코로나 대응)	<p>【양육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보건소 직원들이 확진자의 유아 자녀(6,7세) 돌봄】</p> <p>(문제점/필요성) 양육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이송되어 돌봐줄 다른 가족 없이 유아들만 홀로 남게됨</p> <p>(조치)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재가노인센터로 유아들을 데려와 보건소 직원들이 근무조를 편성하여 주·야간 교대로 식사, 빨래, 목욕, 학습 등 돌봄</p> <p>(결과/효과)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유아 자녀를 안전하게 돌봄</p>

기관명		제도 활용 구분	추진 내용
광역	기초		
경남	양산	제도외 (기타 적극적 자세로 코로나 대응)	<p>【마스크 품목허가 승인기간 단축】</p> <p>(문제점/필요성) 코로나19 대응관련 기업 방문시 통상 40일에서 수개월까지 소요되는 마스크 공장 인·허가 절차로 기업의 애로사항 접수</p> <p>(조치) 코로나19로 마스크 부족의 사태의 시급성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식약청과 지속 협의를 통해 2주만에 완료</p> <p>(결과/효과) 신규 마스크 제조업체의 안정적 생산(KF-94 마스크 일 4만장) 기반 마련</p>
경남	양산	제도외 (기타 적극적 자세로 코로나 대응)	<p>【손 소독제 중국산 용기 부품 수급문제 해결】</p> <p>(문제점/필요성) 코로나19 대응관련 기업 방문시 손 소독제 용기 부품(펌프)이 전량 중국에서 수급되나 수입이 되지않아 기업의 애로사항 접수</p> <p>(조치) 소독제 용기 부품 제작 가능한 업체를 수소문하였으나 제작이 어려워 시에서 부품이 필요하지 않은 대용량 용기로 손 소독제 구입(5리터 660통)하고 비치</p> <p>(결과/효과) 제조업체의 손 소독제 생산 지속으로 기업 경제 안정</p>
제주	-	제도외 (기타 적극적 자세로 코로나 대응)	<p>【북 드라이브 스루(Book Drive-Thru) 예약도서 대출서비스 실시】</p> <p>(문제점/필요성) 코로나19 대응으로 공공도서관 임시휴관 장기화로 주민 불편</p> <p>(조치) 공공도서관 홈페이지 사전 예약을 통해 주2회 드라이브 스루 도서 수령</p> <p>(결과/효과) 코로나19로 위축된 주민의 생활 만족도 제고</p>
제주	-	제도외 (기타 적극적 자세로 코로나 대응)	<p>【홀로사는 노인 코로나19 예방물품 맹심(명심의 제주어) 주머니와 생필품 지원】</p> <p>(문제점/필요성) 코로나19 확산으로 홀로 사는 노인의 맞춤형 예방수칙 안내 및 물품 배부 필요</p> <p>(조치) 홀로사는 노인(6304명) 등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사들이 직접 방문·안내하고 마스크, 체온계, 생활필수품을 담은 주머니 전달</p> <p>(결과/효과) 홀로사는 노인의 코로나19 예방에 기여</p>

2. 기타 적극행정 사례

기관명		분야 구분	추진 내용
광역	기초		
경기	안산	경제 분야 (건축 개발 산지 농지 등)	<p>【공유재 공유수면의 독점적 점·사용에 대한 점·사용료 징수】</p> <p>(문제점/필요성) 공유수면 상부공간을 점·사용하고 있는 송전선로 점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과거 법령 미흡 및 사례가 전무하여, 20여년간 대형 공기업의 공유수면에 대한 독점적 이용에도 불구하고 송전철탑에 한정하여 점·사용료가 부과 징수되고 있었음</p> <p>(조치) 공유수면 관리법의 입법의 취지와 송전선로는 공유수면 상부공간에 떠 있는 인공구조물로 점용료 처분대상이라는 법률의 명확한 해석을 통해 과거 점·사용에 대한 소급 징수하고, 향후 지속적인 세외수입 확보 근거 마련</p> <p>※ (추진과정) 중앙부처 질의 및 법령 검토(3회, 3부처) → 점용료 부과처분 → 점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(3심 : '18.5.~'20.1.) / 최종판결 : 원고기각 → 송전선로 면적 확정을 위한 해당 공기업과 협의(10회) → 면적 확정('20.2.12.)→ 징수</p> <p>(결과/효과) 공유수면의 배타적 독점적 사용에 대하여 점·사용료를 징수하여 세외수입 확보</p> <p>※ 2013. 3. ~ 2019. 5. 소급 점용료 : 212억원</p> <p>※ 향후 5년간 징수 예정액 : 199억원(공시지가 7% 상승률 반영)</p>
행안부 충북	-	경제 분야 (건축 개발 산지 농지 등)	<p>【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적극적 해석 : 사전컨설팅 활용】</p> <p>(문제점/필요성) 오송 바이오폴리스 지구 내 단독택지(148필지) 수분양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,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맞지 않은 상황이 발생, 차로의 너비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부설주차장 설치 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민원인이 사전컨설팅 요청</p> <p>(조치) 확정측량 결과 부설주차장 '차로의 너비' 기준(6m)에 1~7cm 부족하나, 1)수분양자가 주차장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도로 점용 허가를 받고, 2)차량의 진출입에 장애물이 없는 경우 차량의 이용 공간 확보가 가능하므로 부설주차장 승인이 가능하다고 사전컨설팅 의견을 회신</p> <p>(결과/효과) 적극적 해석으로 주민 편의 제공</p>
충북	진천	기타 분야	<p>【코로나19로 중지된 사업의 기 사용된 보조금 부담 주체 : 사전컨설팅 활용】</p> <p>(문제점/필요성) 코로나19 영향으로 청소년국제교류사업이 중지되어 기교부된 보조금을 반납할 경우 보조금 관리기준에 의건 보조금/자부담 비율대로 정산·반납이 원칙이나, 이미 사용된 항공기 취소 위약금 부담이 문제됨</p> <p>(조치) 코로나19의 국제적인 비상사태로 불가피하게 사업이 중지된 사유를 감안하여 항공료 위약금은 균비로 지원해도 가능하다고 사전컨설팅 의견 회신</p> <p>(결과/효과) 적극적 해석으로 보조사업자 보호</p>

기관명		분야 구분	추진 내용
광역	기초		
대전	-	기타 분야	<p>【유기한 서식민원(123종)의 원스톱 민원서비스 시행】</p> <p>(문제점/필요성) 유기한 서식민원의 접수와 처리의 이원화로 문서 발송, 담당자 지정, 부서장 결재 등 여러 단계의 절차로 인해 처리기간이 과다하게 소요</p> <p>(조치) 기존 15개 부서에서 분산 처리하던 유기한 서식민원(123종)을 '원스톱 민원팀'에서 일괄처리</p> <p>(결과/효과) 유기한 서식민원의 처리기간의 대폭 단축 및 적극적 민원서비스 제공</p>
전남	-	기타 분야	<p>【현안사업의 집단지성으로 해결 시행】</p> <p>(문제점/필요성) 미해결 현안사업 해소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 필요</p> <p>(조치) 내부행정망에 '현안사업 코너'개설, 부서별 현안을 전 직원이 공유</p> <p>* 부서 현안의 행정망 게시·공유 → 직원 누구나 해결 방안 제안 → 현안 담당부서에서 제안 심사·채택 → 채택안 사전 컨설팅 감사 진행(필요시) → 채택안 시행 → 제안자 시상</p> <p>(결과/효과) 적극행정 집단지성으로 해법 도출하여 현안사업을 적극 추진</p>